

## 2022년 중국 경제 이슈 전망과 시사점



한중DB

중국으로 다가서는  
열린 세계

# 2022년 중국 경제 이슈 전망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한재진 연구위원 (hzz72@hri.co.kr)

## ■ 목 차

1. 최근 중국 경제 현황
2. 2022년 중국 경제 이슈 및 전망
3. 시사점

- 2021년 중국 경제는 하반기부터 이어진 부동산 부실 확산, 공급망에 따른 생산자물가 급등 등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둔화세가 지속
  - 2021년 중국의 3, 4분기 GDP는 각각 4.9%, 4.0%로 둔화하는 가운데, 연간 GDP 증가율이 당초 예상보다 소폭 높은 8.1%를 기록
- 2022년은 부동산 경기 냉각, 공급망 악화 지속, 미·중 기술전쟁 심화 등 대내외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5%대 초반이 예상됨
  - OECD('21.12), World Bank('21.12) 등 국제기관은 올해 5.1% 성장을 전망
- 정책적으로는 2021년 제시한 ‘공동부유’에 대한 국정통치 이념 실행을 위해 부동산 및 민간 부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
- 2022년 중국 경제 주요 이슈는 △딜레마에 빠진 성장 패러다임, △부동산 빙하기 도래, △부담되는 유동성 공급, △건강하지만 위협받는 외환 건전성, △차세대 핵심기술 흡수력 약화, △중국공산당 리스크 확대 등 6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향후 중국 경제는 부동산 문제, 미·중 기술 전쟁 격화 등 대내외 하방리스크 확대로 경기둔화는 예상되나, 확대 재정 및 완화된 통화정책에 따른 회복도 기대됨

## 1. 최근 중국 경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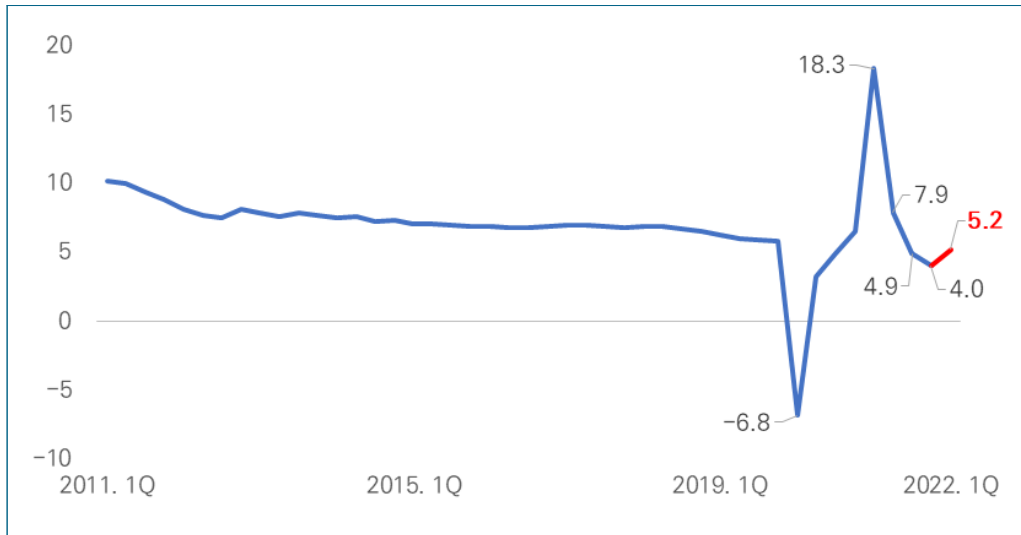
### 1) 2021년 중국 경제 동향

- 2021년 중국 경제는 2020년 하반기부터 회복세가 상반기까지 이어졌으나, 하반기부터 공급망 악화, 부동산 부실 등에 따른 하방압력으로 둔화세로 전환
  - 중국의 분기별 GDP는 2021년 3, 4분기는 급감했으나, 시장의 예상치보다 소폭 상회하며 연간 8.1%를 기록
    - 2021년 1분기 GDP는 18.3%로 급증하면서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6.8% 급락에 대한 기조 효과를 반영했으나, 2·3·4분기 각각 7.9%, 4.9%, 4.0%로 둔화세를 보임.
    - 산업생산 증가율도 2021년 12월 4.3%로 동년 9월 이후 5%대 이하 지속

- 외수 경기는 20%대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 및 투자 등 내수 경기는 하반기로 진입하면서 한 자릿수 증가세로 돌아섬.
- 중국의 대외수출 증가율은 2020년 10월부터 두 자릿수 증가세로 돌아선 후 15개월 연속 약 20%대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 이는 중국의 대세계 수출 비중이 높은 미국(16%), ASEAN(15.6%), EU(15.2%) 등 지역 및 국가에 대한 수출증가율이 2020년 4분기부터 급증한 데 기인함.
- 반면, 소매판매 및 고정자산투자(누적) 증가율은 2021년 12월 현재, 각각 1.7%, 4.9%를 기록하며, 하반기부터 둔화세가 뚜렷

[그림 1] 중국의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증가율, %)



주: 2022년 1분기 전망치는 중국인민대학(21.11) 발표치 참조.

자료: CEIC, 21世纪经济报道.

## 2) 2022년 전망

- 2022년 중국 경제는 공동부유 등 분배중심의 국정 기조 강행에 따른 규제 강화로 상반기에는 민간 경기뿐 아니라, 부동산 경기 냉각이 전망되나, 하반기부터 완화된 재정 및 통화정책으로 소폭 개선 기대

- 올해 중국 경제는 정부규제 및 부동산 경기 위축 등 경기 하방리스크 누적과 전력난에 따른 생산 차질 등 영향으로 2022년 상반기까지 경기둔화 예상
- 다만, 2022년 하반기에는 완화된 재정 및 통화정책 효과뿐 아니라, 시진핑 3연임 등 이례적인 정책 이벤트로 소폭의 경기 회복도 전망됨.
  - 부동산 대출 억제와 경기 위축, 일부 민영기업들에 대한 규제는 지속되겠지만, 3월 개최될 양회에서 내수 부양과 신성장 산업 및 제조업 지원 등에 관한 부양책 추진이 예상되는 만큼, 경기 회복에 긍정적 효과 기대
  - 아울러, 2022년 10월(혹은 11월) 시진핑 3기 연임 결정 여부와 2023년 3월 전인대를 통해 주석 연임 과정이 남아 있어 중국 내부적으로 경기 급락 발생 방지 필요성도 상존
- IMF, OECD 등 국제기관은 2022년 중국 경제가 6%대 중반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주요 IB들은 4%대 후반으로 예상
  - IMF는 5%대 중후반, OECD·세계은행·중국사회과학원·Nikkei 등은 5%대 초반을 예상했으며, 9개 IB는 4.8%(평균)를 전망

**[표 1]** 주요 기관의 2022년 중국 경제 전망

(단위: 증가율, %)

구분	2022(E)
IMF('21.10)	5.6
OECD('21.12)	5.1
World Bank('21.12)	5.1
중국사회과학원('21.12)	5.3
Nikkei('21.12)	5.1
9개 IB평균('21.11)	4.8

자료: IMF, OECD, WB, 중국사회과학원, 국제금융센터.

### 3) '공동부유(共同富裕)' 새로운 국정 기조 발표

#### ■ 2021년 중국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기념하며 두 개의 100년 중 하나를 실현했음을 강조

- 2021년 7월 1일 중국공산당 창당(1921년 7월 23일 창당) 100주년 기념식을 진행
- 2049년 신중국 수립 100주년에는 중국몽(위대한 중화민국의 부흥)과 공동부유 실현을 강조
  - 중국 2개의 100년(兩個一百年)은 ①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1921→2021), ② 신중국 창립 100주년(1949→2049)
  - '중국몽'은 시진핑 주석이 2012년 11월에 중화인민공화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로 추대되면서 처음 언급
  - 시진핑의 중국몽은 '위대한 중화 민족 부흥'과 중국 특색을 반영한 지역 패권 국가 구축을 위한 목적으로 설계, 7월 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에서 2021년 샤오캉 사회 진입 공식 선언

#### ■ 2021년 8월 17일, 제10차 중앙재정위원회에서 공동부유를 새로운 국정 통치 이념으로 선언하며, 성장에서 분배로의 전환 추진

- 마오쩌둥의 공부론(共富論)과 덩샤오핑의 선부론(先富論)에 이어 시진핑의 공동부유론(共同富裕論) 등장
  - 공부론은 농민 중심의 사회주의 혁명을 이끈 마오쩌둥이 '모두가 잘 살자'라 고 주장한 통치 철학
  - 반면, 선부론은 덩샤오핑이 1978년 개혁개방 당시 '일부가 먼저 부자가 되게 하자'라는 국정 철학으로 마오쩌둥과는 차별적
  - 시진핑의 공동부유론은 덩샤오핑의 선부론보다는 마오쩌둥의 공부론에 가까운 논리를 강조한 개념

- 다만, 공동부유 등장으로 빅테크 규제, 사교육 금지, 부동산 규제('20.8부터) 등과 2060 탄소중립 선언 등 대대적인 친환경 정책(저탄소) 강화에 따른 석탄 기업 규제 강화로 향후 경제 전반에 걸쳐 과도기적 부작용 발생이 예상

## 2. 2022년 중국 경제 이슈 및 전망

### 1) 딜레마에 빠진 성장 패러다임

#### ■ 12차 5개년계획 질적 성장 기조, 14차 5개년계획부터 강조하고 있는 쌍순환 등 내수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 심화

- 중국은 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부터 내수 중심의 질적 성장을 강조
  - 12차 5개년 계획의 핵심 목표는 내수 확대이며, 과거 수출 및 투자 주도형 성장 등 노동집약형 성장 모델의 주체인 제조업 부문의 개혁을 강조
  - 또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제조업보다 높은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을 높여 친환경 경제에 대한 초보적 모델 시범 시행
- 2021년부터 시작된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에서는 쌍순환(雙循環) 정책을 채택하며, 미·중 통상마찰에 대비해 자립형 내수 성장에 무게를 둔 내·외수 선순환 전략을 추진
  - 쌍순환 전략은 2020년 5월 14일 중국공산당정치국상무위원회에서 최초로 제기되어 동월에 개최된 양회(兩會)에서 시진핑 주석이 재차 강조
  -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시장 잠재력을 활용해 내·외수 상호 순환 경제를 구축”하자는 취지는 미·중 통상마찰 장기화, 코로나 팬데믹 상황 등을 염두 한 정치적 포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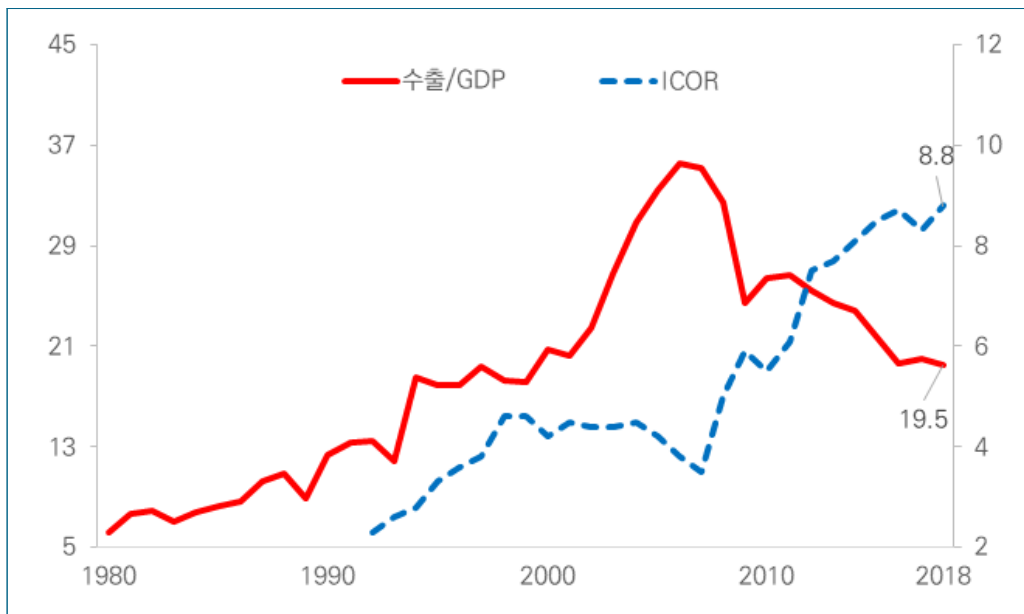
#### ■ 그러나, 미·중 통상마찰로 심화하는 공급망 약화, 탄소중립 정책 강행으로 우려되는 전력난 문제 등 내수 중심의 질적 성장 궤적에 피로감 노출

- 미·중 통상마찰이 장기화하면서 미국의 화웨이 등 중국기업 제재와 같은 공급망 약화 영향 사건이 빈번, 향후에도 더욱 심화 예상
- ‘2060 탄소중립’ 선언으로 석탄 의존성을 낮추는 과정에서 나타날 전력난 문제도 부담이 되는 상황
  - 2021년 4월, 미·중 통상마찰이 뇌관이 되어 발생한 중-호주 간 석탄, 소고기, 와인 등 수입제한 조치 후 전력난이 발생

- 2021년 11월 호주산 석탄 수입 재개로 양국 간 갈등이 잠시 봉합되었으나, 중국의 석탄생산증가율은 동월 6.8%로 급증하며 사실상 탈(脫)탄소 정책을 잠정 보류
- 더욱이 내수 중심의 질적 성장주도 전략이 10년간 지속되면서 수출주도 성장은 목표대로 진행되고 있으나, 투자 부문의 비효율성은 여전히 늘어나는 상황
- Lowy Institute(2019)에 따르면, 중국의 GDP 대비 수출 비중은 1980년 6.2%에서 2006년 35.6%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 우하향하고 있음.
- 그러나, 생산량 1단위에 몇 배의 자본이 필요한가를 나타내는 한계고정자본계수(ICOR, Incremental Capital Output Ratio)는 지속 우상향하는 등 투자의 비효율성이 여전히 높아지는 추세
- 중국의 ICOR은 1992년 2.3배에서 2018년 8.8배로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2]** 중국의 한계고정자본계수(ICOR) 추이

(단위: 비중 %, 배)



자료: Lowy Institute(2019).

## 2) 부동산 빙하기 도래

■ 지난해 디폴트 위기에 직면한恒大그룹(恒大集团) 등 부동산개발업체 부실 확산으로 2022년 중국 부동산 시장은 유례없는 불황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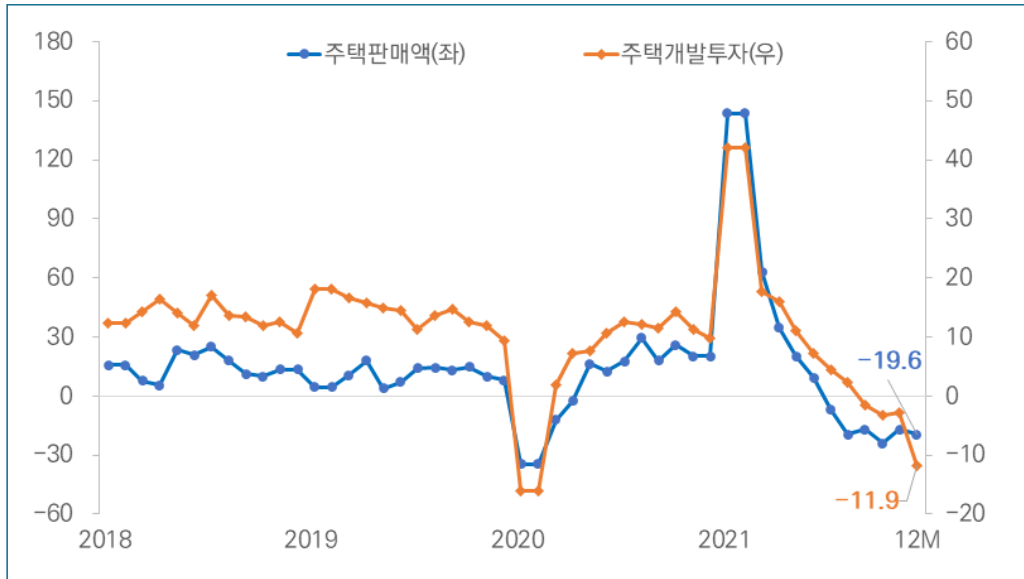
- 중국 부동산 관련 산업은 전체 GDP에서 약 18%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산업 입지를 보임.
  - 2020년 기준 중국 GDP(101조 위안)에서 부동산업(7.3조 위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7.2% 수준
  - 이를 건설업과 임대업으로 확장하면 부동산 관련 산업 규모는 약 18조 위안으로 전체 GDP의 약 18%를 차지
- 최근 부동산 경기는恒大사태 이후 2021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냉각되고 있는 상황
  - 중국지수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의 100대 도시의 평균주택가격 증가율은 2021년 12월 현재 2.4%로 동년 5월 4.75% 이후 우하향 진행
  - 또한, 중국 부동산 수급을 나타내는 주택판매액 증가율과 주택개발 투자도 2021년 들어 각각 7월, 9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음.

■ 이는 GDP 대비 기업부채 비중이 높은 중국의 부채 문제에 뇌관으로 작용하여 기업경기 위축에도 부정적 작용이 우려됨.

- 국제결제은행(BIS)에서 발표한 2021년 2분기 중국의 GDP 대비 부채 비중은 약 285% 수준임.
  - GDP 대비 부문별 부채 비중을 살펴보면, 가계 61.2%, 기업 156.8%, 정부 66.7% 등 기업 비중이 여전히 높으며, 2008년과 비교해 가계 및 정부 비중도 급증
    - 기업 비중은 G20 국가 비중 107.0%를 크게 웃도는 수준
    - 가계 및 정부 비중은 2008년 각각 17.9%, 27.1%에서 2021년 2분기 각각 61.2%, 66.7%로 3~4배 급증

[그림 3] 중국 주택판매액과 주택개발투자 증가율 추이

(단위: 증가율, %)



자료: CEIC.

### 3) 부담되는 유동성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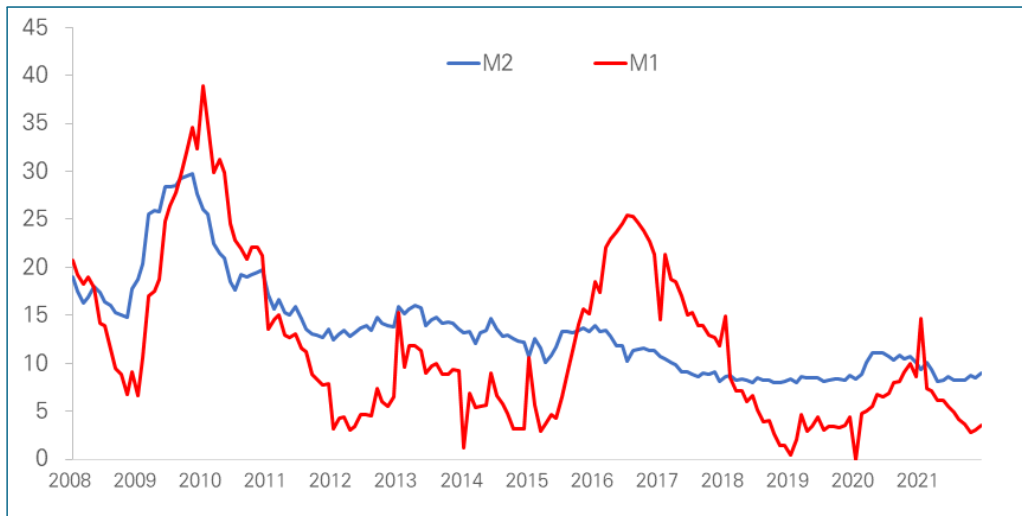
■ 2021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부실 확산, 공급망 약화 등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올해 전반적으로 리스크 해소를 위해 완화된 통화정책 기조가 지속될 전망

- 2021년 하반기부터 발생하고 있는 부동산업체 부실화 문제, 공급망 약화에 따른 생산자물가 급등 등 기업의 유동성 위축 확산
  - 중국인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중국의 협의통화(M1) 증가율이 광의통화(M2) 증가율을 밑도는 양상이 지속, 기업의 경영 위축이 장기화
  - 중국의 유동성을 대표하는 사회용자총액 증가율도 2020년 9월부터 지속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는 상황
  - 생산자물가지수도 2021년 12월 현재 10.3%로 동년 9월부터 10%대 지속
- 이에 따라, 2020년 팬데믹 발생 이전인 2019년부터 완화된 통화정책이 이미 시행되어 오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경기 하강 압력은 지속될 셈

- 2019년에는 예금 지급준비율을 6번 인하했으며, 2020년, 2021년 각각 3번, 2번씩 기준율을 인하해오고 있음.
- 2021년 12월에는 중국인민은행이 기준율 인하와 함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 Loan Prime Rate)를 2020년 4월 이후 처음으로 인하<sup>1)</sup>
- 향후 경기 하방압력이 지속될 때 기준율 및 금리 인하조치가 재차 단행될 가능성이 크나,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자산매입축소) 규모 확대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울 전망
- 2021년 12월 14~15일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테이퍼링 규모를 당초 1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확대 조정
  - 테이퍼링 규모를 늘리면서 경기부양 종료 시점이 올해 3월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만큼, 중국 역시 금리를 지속 인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그림 4] 중국의 협의통화(M1), 광의통화(M2) 추이

(단위: 증가율, %)



자료: 중국인민은행.

1) 인민은행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LPR을 기준금리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 LPR은 중국 내 18개 시중은행이 보고한 최우량 고객 대출 금리의 평균치로, 1년물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에 은행 조달비용, 위험 프리미엄 등을 가산해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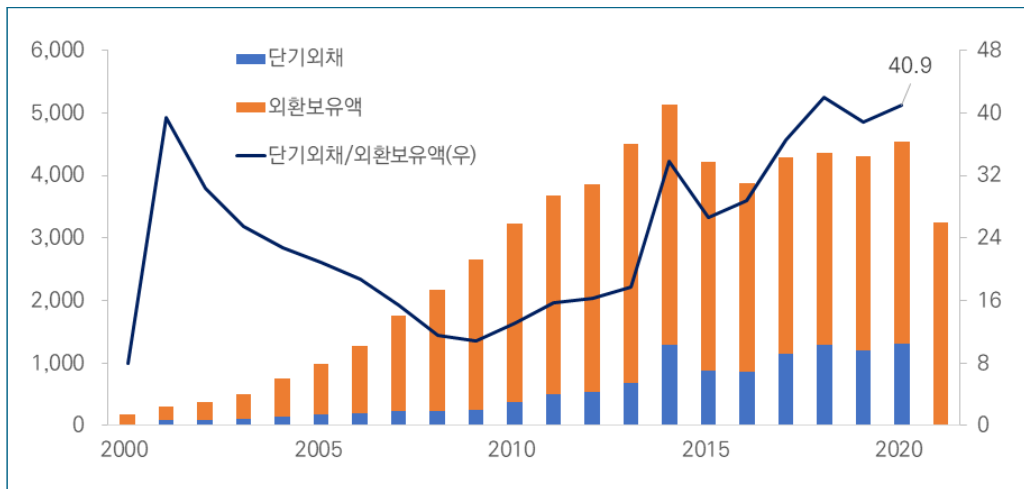
#### 4) 건강하지만 위협받은 외환 건전성

■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3조 달러 선을 유지하며 외환 건전성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단기외채 규모가 역대 최대치로 늘어감에 향후 건전성에 위협 신호 상존

-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10년 넘게 3조 달러대를 유지해옴.
  - 중국인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2011년 3월 3조 450억 달러를 기록하면 3조 달러대로 올라선 후 2017년 1월(2조 9,982억 달러)을 제외하고 지속해서 3조 달러대를 유지
- 다만, 최근 단기외채 규모가 늘어나며,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도 40%대에 육박
  - 2020년 단기외채 규모는 약 13억 달러로 전체 외환보유액 대비 40.1%를 기록
- 한편, 외환 건전성을 판단하는 채무율과 부채율이 안전선을 위협하는 상황
  - 채무율(연말채무총액/그해 수출 수익과 비무역 수익의 합)은 2020년 현재 87.9%로 안전선(100%)을 위협, 부채율(GDP 대비 외채비율)도 동년 16.3%(안전선 20%)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그림 5] 중국의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

(단위: 비중 %, 십억 달러)



자료: 중국인민은행.

## 5) 차세대 핵심기술 흡수력 약화

■ 미·중 간 기술 전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대중국 기술 고립 양상이 격화되면서 중국기업들의 핵심기술 혁신화 단계 도약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 바이든 행정부로 들어서면서 대중국 견제를 위한 전방위적 압박이 심화
  - ‘미국혁신경쟁법안(USInnovation and Competition of 2021)’ 가결을 통해 5년 동안 총 2,000억 달러 예산을 투입해 외교 안보, 산업, 기술 등 총체적 경쟁력 강화를 모색
  - 쿼드(Quad), 오키스(AUKUS), 파이브 아이즈(Five Eyes)<sup>2)</sup>,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 네트워크(IPEF)<sup>3)</sup> 등과 같은 동맹 네트워크를 확대해 대중국 견제
- 중국의 현 기술력을 볼 때, 핵심기술은 미국, 한국, 일본 등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상황
  - 중국의 3대 스마트폰 사례로 살펴보면, 화웨이, 오포, 샤오미 등 3개 업체의 제조원가 대비 외국 기술 의존율은 각각 61.9%, 84.5%, 83.3% 등임.
- 중국 정부는 반도체,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등 첨단제조업 분야에서 2030년까지 달성 목표를 세워놓고 있음.
  - 반도체는 2025년까지 자급률을 70%로 확대, 2030년까지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3단계 전략목표와 5대 중점과제) 발표, 2030년까지 5G 최강국 도약을 위해 5,000억 위안 투자 등 기술력 향상을 위한 중장기 계획 제시
- 다만, 이러한 계획이 막대한 R&D 투자를 통한 자체 기술력 향상을 염두에 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상용화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핵심기술 부문의 대외 기술협력 없이는 혁신화가 어려운 상황

2)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참여), 오키스(호주, 영국, 미국 등 참여), 파이브 아이즈(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등 군사 및 안보협의체를 통해 중국에 대한 사이버 안보 활동 감시 및 제재.

3) 2021년 12월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바이든 정부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새로운 경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계획을 전망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음. 이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및 디지털 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동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견제를 위한 미국 주도의 디지털 협정 강화를 의미함.

[표 2] 중국 주요 스마트폰의 핵심기술 의존도

구분	Huawei P30 Pro	OPPO R11s	Xiaomi Mi MIX 2
Operating System	Android(미국)	Android(미국)	Android(미국)
CPU	HiSilicom (중국)	Qualcomm (미국)	Qualcomm (미국)
Flash Memory	Samsung (한국)	Samsung (한국)	Hynix(한국)
DRAM	Micron Technology (미국)	Samsung (한국)	Samsung (한국)
Display	BOE Technology (중국)	Samsung (한국)	JDI (일본)

자료: ADB·UIBE·WTO·IDE-JETRO·CDRF(2021).

## 6) 중국공산당 리스크 확대

■ 두 번째 100년인 2049년 다통(大同)사회(중국이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 건설을 위해 공동부유론을 앞세우고 있지만, 대내외적으로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향후 리스크로 부상할 가능성 상존

- 부동산 대출규제, 민영기업 규제, 탄소중립 가속 등 공동부유 사회로 가는 단계적 변화로 인한 신개념 리스크 확산
  - 2020년부터 강화된 부동산 대출 규제로 헝다사태 등 부동산 개발업체의 신용리스크 발생
  - 대형인터넷 기업, 엔터테인먼트, 게임, 사교육 등에 대한 규제도 발표
  - 중장기적으로 중국정부의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절감 정책 지속으로 잠재 경기 하방 리스크 상존
- 아울러 대만과의 마찰, 아프간 지원,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등 경제외적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경제성장에 직간접적으로 악영향 예상
- 이러한 중국의 대내외 변화는 결과적으로 시진핑 주석의 3연임뿐 아니라, 장기집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음.

- 2021년 11월 11일 공산당 중앙위원회 19기 6중전회에서 역사적 결의를 채택하며 사실상 시진핑 주석을 마오쩌둥 및 덩샤오핑과 동등한 입지로 승격

[표 3] 중국 공산당의 역대 역사적 결의

	마오쩌둥(1949~1976)	덩샤오핑(1977~1997)	시진핑(2012~?)
발표 시기	1945.4.20.	1981.6.27.	2021.11.11
당시 나이	52세	77세	68세
회의 명칭	공산당 중앙위원회 6기 7중 전회	공산당 중앙위원회 11기 6중 전회	공산당 중앙위원회 19기 6중전회
결의 명칭	약간의 역사 문제에 관한 결의	건국 이래 당의 약간의 역사 문제에 관한 결의	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결의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소련(코민테른)의 지령을 받들던 전임 지도부의 좌경 착오 부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대혁명과 마오쩌둥의 업적과 과오를 구분</li> <li>• “마오쩌둥은 공적이 제일이고 잘못은 두번째” 결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공산당이 왜 성공할 수 있었나</li> <li>• 어떻게 계속 성공할 것인가</li> </ul>
회의 결과	‘마오쩌둥 사상’ 종신 집권체제 확립	덩샤오핑 1인 체제 확립	시진핑 3연임 기반 마련
결의서 글자 수	2만 7,000여 자	3만 4,000여 자	3만 6,000여 자

자료: 내외신 언론 종합, 中共中央关于党的百年奋斗重大成就和历史经验的决议(全文).

### 3. 시사점

■ 2022년 중국 경제는 상반기 동안 헝다사태 등 부동산 리스크 지속 출현 및 전력 대란 후유증 등으로 냉각국면에 이어지겠으나, 상반기부터 이어질 미니 부양책 영향으로 하반기부터 소폭 회복 기조를 보일 전망

- 2021년 3월로 예정된 양회에서는 안정적 성장 기조에 방점을 둘 전망
  - 2021년 12월 8일에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 앞서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적극재정, 온건한 통화정책, △내수 확대 및 소비회복, △시장 주체의 활력 촉진, △부동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선순환, △과학기술·산업·금융의 선순환, △대외개방 확대, △취업·출산 등 공공서비스 건전성 등 거시경제 안정에 초점을 둔다는 기조
  - 이러한 기조는 올해 3월에 열릴 양회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될 전망
- 또한, 2022년 하반기에는 중국 정부의 미니 경기부양과 부채 정상화(디레버리징) 감속이 예상되는 등 소폭의 경기 회복도 예상됨.
  - 부동산 대출 억제와 경기 위축, 일부 민영기업들에 대한 규제는 지속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내수 부양과 신성장 산업 및 제조업 지원 등으로 경기 회복에 긍정적 영향 기대

■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및 외교적 대중국 압박에 대비한 자원 무기화 및 다자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대응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

- 올해 바이든 행정부의 전방위적 경제 및 외교적 압박이 강화될 예상이어서 중국 입장에서 희토류 수출 규제, 자국 내 외국기업 압박 등
  - 예를 들어, 중국은 탈탄소 정책을 통해 친환경 모빌리티 구축을 모색하기 위해 희토류, 니켈, 리튬 등 전기차 배터리 원료 비축량을 늘리는 전략
- 한편, 오키스, 파이브 아이즈 등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대중국 외교적 압박에 맞서기 위해 RCEP, CPTPP 등 다자협력체널 활용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 **형다 사태 등 부동산 부실 확산으로 인해 중국 경제가 급격한 경기 침체에 빠질 경우, 대중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을 미칠 가능성이 우려**
  -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 시장이며, 2021년(잠정치 기준) 우리 총수출 6,445억 달러 중 약 25%인 1,629억 달러가 중국으로 수출됨.
    - 특히 우리의 대중국 수출 품목 중 철강, 석유화학, 중장비 등 건설업과 연관이 있을 품목들의 수출이 많은 편임.
  -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밀접한 경제 연관성으로 중국 경제성장률 1%p 하락시 한국 경제성장률은 0.5%p 하락 압력을 받게 됨.

## 참고자료

- 현대경제연구원(2021). “인플레이션 수입’ 방지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최근 수입물가 폭등의 원인과 시사점”. 현안과 과제. 21-08.
- \_\_\_\_\_. “2022년 10대 경제 키워드-AFTER TIMES(코로나 이후의 미래)”. 경제주평. 22-01
- ADB&UIBE&WTO&IDE-JETRO&CDRF. 2021. “Global Value Chain Development Report 2021: Beyond Production”.
- Lowy Institute. 2019. “China’s Economic Choices”. Analyses.
- “人民大学CMF报告：四季度经济预计增长 3.9%，明年一季度有望达到 5.2%”. 21世纪经济报道. 2021. 11. 23. <http://www.21jingji.com/article/20211123/e8e7ce836ebe8b3bfb3271d3bcd11f22.html>(검색일 2021년 12월 20일)
- 中共中央关于党的百年奋斗重大成就和历史经验的决议(全文).
- 중국국가통계국(<http://www.stats.gov.cn/>).
- 국제결제은행(<https://www.bis.org/statistics/totcredit.htm>).
- CEIC(<https://www.ceicdata.com/ko>).